

문 대통령 “5·18 발포명령자·헬기사격 진상 규명돼야”

“진실 은폐·왜곡 공작 실상 밝혀야... 폼페이엔 단호한 대응” 헌법 수록도 강조... 21대 국회 특별법·처벌법 처리 탄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0년 5월 광주에서 발포 명령자 등 전반적이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책임자를 가려내 국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을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폼페이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서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왜곡·폄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민주당이 21

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됨에 따라 5·18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등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불가능, 진상규명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사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5·18 역사 왜곡 및 폼페이 행위에 대한 처벌법은 물론 5·18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법 마련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거부 반응을 보여왔던 미래통합당도 21대 국회들어 적극적인 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5·18은 여야의 협치를 넘어 국민통합과 국가적 미래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 등은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미래통합당은 5·18 왜곡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80년 광주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이를 토대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왜곡·폄하를 막는 법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희생자들 금남로 행진 5·18 4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오월시민행진이 펼쳐졌다. 시민들이 5·18 희생자의 모습을 인형으로 제작해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당선인 “5·18 관련법 개정, 21대 국회서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인은 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 발의할 5·18 관련법은 이른바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이다. 당선인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

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21대 국회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헌정질서 파괴 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골자로 한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광

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교체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

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달구벌 권영진 시장, 광주 5·18 기념식 참석

광주서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17일 광주시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수석부회장은 18일 광주 5·18 40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광주시민 온정에 대구시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

다”며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구와 광주는 더 굳건한 관계가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1시 30분에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45차 총회도 연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극복 방안을 협의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5·18 40주년 조기 계양 권고... 전남도는 옛 현판 제막식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집집마다 조기를 계양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전남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전남도청 운선도홀에서 ‘전남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과 ‘옛 전라남도청 현판 및 기둥’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5·18은 6·25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위해 시 청사에 조기를 계양할 테니 시민들도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조기 계양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5월 18일을 조기계양일로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내린 집회 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정치해달

라는 자유연대 측의 가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환영 입장도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또 17일에는 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고, 5·18 민주화운동 폄하·모욕 발언을 사과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동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980년 5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옛 전라남도청 현판 및 기둥’

을 복원함으로써 올해 40주년을 맞은 전남 5·18민주화운동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불의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위대한 민중항쟁으로 6월 항쟁과 촛불항쟁을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다”며 “이번 복원한 옛 전라남도청 현판은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광주·전남 시민들의 처절했던 항쟁의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로운	일상	
생활	속	거리	두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0.05.06.